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8월

## 전문가 기고

E.S.G. 제도화 물결: 한국의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

## 주요 이슈

지속가능 정보 공시 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방안

##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 E.S.G. 제도화 물결: 한국의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팀장

지난 2023년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sup>1)</sup>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초안을 확정 발표했다.<sup>2)</sup> 곧이어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 역시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서둘러 채택하는가 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ttee, 이하 'SEC') 또한 2022년 3월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 규정 초안을 곧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 진화, 제도화 담론이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E.S.G. 즉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K-ESG 가이드라인 v.1.0」과 「공급망 ESG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도 아니어서 업계에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이하

'KSSB')<sup>3)</sup>를 설립하여 지속가능 공시 제도를 IFRS 체제와 흡사한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한국이 사회적·경제적 대전환기를 맞아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 공시 체제 구축에 이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실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sup>4)</sup>

특히 법제도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 규범의 확립과정에 비추어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다음 쟁점들 역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첫째, 최근 앞다투어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산업 특성과 구조가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다. 글로벌 평가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이터와 전문성,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E.S.G. 리스크를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각 국가별 로컬 평가사들만큼 해당 국가에 특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제 당국과 여론 등의 분위기와 같은 특수한 정보를 반영한 공시 기준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로컬 평가기관이 해당 지역의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E.S.G. 리스크를 예측 및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

1) ISSB는 2001년 설립된 비영리기구인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 산하에 2021년 11월 경 설치된 협의체로서, 글로벌 지속가능성(최근에는 소위 E.S.G.) 공시기준 통합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인「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제정을 추진해 왔다.

2) ISSB는 기후와 관련한 사항은 TCFD의 공시 기준으로 전적으로 수용하고, 유럽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의 적극적인 원용을 권장하면서도 산업 특성별 지속가능 공시와 관련해서 SASB 기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3) KSSB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회계기준원장 및 상임위원이 겸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3인)과 추천위원(2인)의 비상임위원을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현재 추천위원은 ① 3개 회원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과 ② 각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정책과 공정시장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2022.12.15.), 2-3면.

4)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2021년 초부터 불완전하게나마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확립 로드맵과 정책적 방안들은 우선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 동향에 순차적으로 맞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E.S.G. 제도화 담론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비판적 견지에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IFRS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의 마련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공여지책으로 SASB의 기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미국의 77개 산업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기준이 국내 사업에 부합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산업 분류 체계와의 부합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과 각 산업이 처할지도 모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sup>5)</sup>

둘째, ISSB는 기후변화 공시 외에 후속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연구·개발하겠다는 입장 외에 환경 중에서도 기후 이외의 요소라든지, 사회, 거버넌스 쟁점에 대한 청사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후를 제외한 E.S.G.의 각 영역은 아직까지 이러한 행동 유인이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지속적 논의와 관심이 요청된다. 더불어 유럽연합이 제도화한 바 있는 기업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국내적 수용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그 근처에 있어서는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세트(global standard setter)들의 다소 불분명한 입장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E.S.G. 공시 제도 구축에 있어서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환경과 사회 등으로부터 기업이 받는 영향만을 고려하는 이른바 단일 중요성(single materiality)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에 더하여 기업이 환경과 사회 등에 미쳤거나 미

치게 될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지속가능 공시 제도의 확립된 입장이자 나아갈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담론 역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국내에서 E.S.G.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사업보고서 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공시의 주기, 방법 및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 등에 이르는 실무적인 사항들을 최소한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IFRS가 사업 보고의 주기와 지속가능성 보고 주기를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 역시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24년 회계연도부터는 본격적인 기준의 확립, 이해, 수집, 분석, 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해외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반드시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 주기에 맞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공시 시스템 속에서 공급망 사슬 내에 포함되는 수많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공시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관된 공시 주기를 정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의적 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규범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둘러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 v.1.0」과 「공급망 ESG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점, 현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로는 그 점

5)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유경 외,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3.11월 발간예정)에서 SASB 기준의 국내 산업분류체계 정합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6) KOSPI 상장사 약 200개 기업 정보를 K-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 연구로는 이준서·임새훈, “E.S.G. 법적 기초연구(III):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E.S.G.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2.9.) 참고

수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sup>6)</sup>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지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뢰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sup>7)</sup>

다섯째, 그와 별도로 E.S.G. 정보의 인증, 평가, 외부 검증 제도의 객관성, 합리성, 중립성,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추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워싱(washing)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와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공적 규제의 기능을 확보할 제도적 고안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일차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확립에 있어서 주로 ISSB 기준을 전면 수용하고자 하는 타당성 확보의 기반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SB가 강조하는 공시의 일반원칙과 이후 관련 정보 공시는 사회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는 단일 중요성(single materiality)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의 제도화 과정에는 ISSB 기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론을 제외하면, 비재무정보 등의 공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보단 노동자나 소비자나 같은 폭넓은 이해관계자는 사라지고, 오로지 투자자만 남은 듯한 E.S.G. 제도화가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E.S.G. 제도화의 방향인지 다 함께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고질적인 한국형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을 해왔으며,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공급망을 두루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고심해 왔다. 그만큼 자본주의에 더 잡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이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장기화되어가는 경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종 산업안전사고, 과로사, 직장 내 갑질과 젠더 차별의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의 성패와 진정성을 가르는 시험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끝으로 E.S.G. 제도화 담론이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공공분야에서의 E.S.G. 논의는 경영평가에 일부 지표를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르는 공적 주체들 역시 E.S.G. 영역에서의 책임 이행이 요구될 전망이다.

---

7) 「K-ESG 가이드라인 v 1.0」과 「공급망 ESG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지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최유경, “E.S.G. 법제 기초 연구(III):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23. 8.) 참고.

# 지속가능 정보 공시 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방안

지속가능경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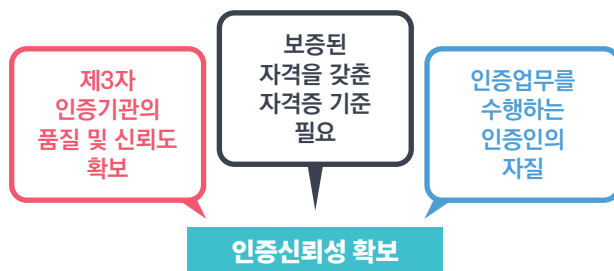
2025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제도 도입 시 기준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ESG 정보 보고와 인증 업무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인증 업무 제공자인 인증인에 대한 적격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 공시와 자율 인증 단계지만, 앞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되면 제3자 인증의 의무화와 품질 관리, 순차적 인증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증 표준에 대한 이해 (AA1000AS 와 ISAE3000)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ESG 정보 인증 표준으로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 Ability)가 제정한 AA1000AS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의 ISAE3000가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발간하는 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인증의견서의 80% 이상이 AA1000AS의 인증 표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다른 접근법이지만 상호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AA1000AS는 정보공시로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임팩트를 검토하고 자료 수집의 범위를 구분하여 인증을 시행한다. 한편 ISAE3000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표한 'Non-Authoritative Guidance on Applying ISAE 3000 (Revised) to Sustainability and Other Extended External Reporting (EER) Assurance Engagements'를 채택한 것으로 인증 기준에 대한 사용자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인증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며 제한적 인증과 합리적 인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ISAE3000은 국제회계기준인 IFRS와 호환되는 부분이 많아 대기업들이 주로 택하는 방법이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방안



## 인증 절차의 이해

### 문서 검토(On-desk Document Review)

- 방법 : 비재무정보는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인증 기준에 따라 고객사 제공 데이터, 미디어리서치 자료에 대한 교차 분석, 작성 표준(GRI, SASB, TCFD)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 초안에 담긴 재무 정보가 당해연도 감사 받은 재무제표, 내부 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재무제표 등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검토. 확인
- 절차 : 보고서 초안에 대한 문서 검토(On-desk Document Review) 후 질의응답지를 작성하여 현장인증시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고객사에 발송
- On-site 인증을 위한 일정 확인 및 질의응답지 답변서를 사전 수령

### 현장 인증(On-site Visit Verification)

- 목적 : 보고서상 지속가능경영활동 및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유효성 평가
- 방법 : 담당자 인터뷰와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 검토
- 주요 인증 활동 (보고서로 파악된 내용에 대한 현장 인증)
  - 기업의 고유한 보고체계의 신뢰성, 견고한 지배구조, 광범위한 정보와 데이터의 일관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이슈선정 및 보고체계, 조직대응방법 등 확인
  - 보고서 내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서술 내용,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 당해연도 지속가능경영 성과 평가
  -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방법 및 보고서 자료 제공 책임이 있는 주요 담당자와의 인터뷰



## 확인 심사(Resolution of Findings)

- 문서검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오류, 부적절한 정보, 보고서 전체 맥락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및 최종 보고서 반영 검토

## 인증의견서 발행(Statement Issue)

- 인증의견서 발행 : 별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AA1000AS) 대부분은 따로 개선을 위한 제안은 따로 없고 품질 보증에 관한 의견을 수록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 국문 및 영문 인증의견서 첨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 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1, 제3자 인증 기관의 품질 및 신뢰도 확보

기업의 ESG 공시가 거래소 의무공시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25년 이후에 법정공시가 의무화될 경우에 공시 인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이런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졌다. 즉 전문적인 인증 인력도 중요하지만 인증 업무를 담당할 신뢰성 있는 기관 즉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제3의 인증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게 된다. 제3자 인증이 법정공시와 더불어 의무화될 경우 법적 리스크 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모두 회계사나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회계법인이 ESG 전문가, 기후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시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 진다.

또한 제3자 인증의견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프로토콜(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즉 누가 인증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하며 해당 기관이 과거에 어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후 인증을 했는지에 관한 프로파일(profile)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제3자에 보고서 인증을 의뢰하고 인증 기관은 인증의견서를 작성하지만, 그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사후 인증의견서를 발

행하는 수많은 소규모 기업 및 기관들이 소액을 받고 사후인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인증의견서를 관행적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어떤 인증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표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 보유하지도 않은 채 사후인증을 시행하고도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2, 보증된 자격을 갖춘 자격기준 필요

인증인력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해당 자격 직렬의 사람들에게 추가 권한을 주는 게 맞는지, 해당 업무를 오래 하면 자격을 줄 것이지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예를 들면 현재 인증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인력들(회계사, 변호사 포함), 혹은 인증 전문기관에서 이미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증 시험을 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3자 인증 의무화와 이에 따른 인증 업무의 법적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한 인증기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인력들에게 자격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의무공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2개~3개 회사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1,200개의 기업 기준 최소 40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2,3명의 팀으로 움직이면 800~1,200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회계법인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에 법적 책임을 지듯, 비재무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도 이를 적용해 '인증책임제'가 도입되면 인증기관과 인증인의 자격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 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3,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의 자질

인증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인은 감사인과 유사한 업무 수행하게 된다.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 인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인증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G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문서 인증(On-desk Document review) 시 기업이 제시하는 100 여페이지 내외의 방대한 기업의 ESG 성과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시하는 ESG 관련 전문적인 지식 이상의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기업은 보고서 작성시 그린워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작은 성과를 크게 과장하기도 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보고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때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중복하거나 앞 뒤 숫자가 틀리기도 한다.

둘째, 인증인은 작성표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프레임워크의 경우 전체의 90% 이상이 GRI Standards를 따르고 있는게 현실이고 여기에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나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채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인은 작성표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GRI 표준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인이 이에 대한 부족한 이해 기반으로 형식적 인증을 함으로써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트리기도 한다.

셋째, 독립된 제3자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인증인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인은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및 전문가적 품위의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인증 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인증 고객사와의 이해상충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증인과 인증인 소속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제품질관리기준서1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직 기준과 해당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문서화를 포함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증인의 자질

**첫째, ESG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함**

**둘째, 인증인은 작성표준에 대한 깊은 이해필요**

**셋째, 독립된 제3자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적용**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최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넷제로(Net-zero) 달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기업들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한 유럽지속가능보고표준(ESRS)가 확정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제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ESG 공시가 우리 기업들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ESG 주요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 해외 ESG 뉴스

#### 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 사우디 등 반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3505692?OutUrl=naver>

세계일보 | 2023.07.23.

#### CBAM, 10월부터 제품 배출량 데이터 수집... 2024년 보고 시작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082>

임팩트온 | 2023.08.21.

#### “지구가 끓고 있다... 온난화 끝, 열대화 시대” 경고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28/120465914/1>

동아일보 | 2023.07.28.

#### 기후변화 관련 소송, 5년새 두 배 넘게 급증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7/31/CRF6RZ6E5JELTAZOHCDNJRAC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7/31/CRF6RZ6E5JELTAZOHCDNJRAC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조선비즈 | 2023.07.31.

#### EU, 유연성 높인 ESRS 공시기준 확정... “ISSB와 상호운용성 확보”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9>  
ESG경제 | 2023.08.01.

### 국내 ESG 뉴스

#### 정부, ISSB 공시기준 조기 도입에 신중... ‘27년부터 ESG 공시 사업보고서에 통합 가능성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

ESG경제 | 2023.07.03.

#### “삼성도 못 지킬 규정”...ESG 공시 로드맵 비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106466356774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2023.07.23.

#### 기후위기 정보 하나로 모은다... 환경부 플랫폼 개발 착수

<https://www.etnews.com/20230731000148>  
전자신문 | 2023.07.31.

#### 국내 ESG 평가기관 아직 수준 미달... 금융 부문별 특성 반영 없어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760>

한스경제 | 2023.08.01.

####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033](http://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033)  
서울파이낸스 | 2023.08.02.



# ESG 통계 지표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12	213	215	221	227	231	249	247
사회적채권	1,070	1,083	1,103	1,138	1,164	1,201	1,246	1,281
지속가능채권	299	298	300	299	297	290	297	292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00	201	205	210	215	217	243	241
사회적채권	1,572	1,565	1,576	1,638	1,666	1,713	1,768	1,803
지속가능채권	213	213	213	212	211	214	217	216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23.7)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34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23.7)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3.7) \* CF100 참여 기업(기관) 수: 121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	-	-	6	14	27	34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15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3월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4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5월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8월 |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9월 | TCFD 개요 및 적용 현황

10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현황

11월 | ESG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생물다양성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